

강경 vs 온건... 대기업 vs 中企... 노조 vs 경영진

‘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協의 민낯... 파열음만 가득

한국당 ‘경제정책 대전환’ 요구에 당정청 “정부탓 공세 멈춰야” 협의체에 ‘전경련 포함’ 여부 등 한국당·민주당 의견 엇갈려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민관정(민간·관료·정치)의 한 목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바뀌고 있다. 위기 돌파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여당과 야당,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조합과 사업체·정부 간 갈등 심화로 자칫 더 큰 파국을 부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대응 vs 온건외교... 여야 기초 평행선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14일 2차 회의를 실시한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결의로 지난달 31일 구성된 협의회는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특별위원회 수장등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 고위 인사,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경제·노동단체가 참여한다.

앞서 상경례와 의제 설정에 나선 협

의체는 보름 가까이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큰 문제는 첨예하게 갈린 여야의 대응 기조와 상대 정당 비판이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이번 사태를 ‘한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품목 국산화 등을 위해 기업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수권의 ‘경제정책 전환’ 요구에 대해서 “정부 탓 공세를 멈추라”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야당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 불안 심리를 과도하게 유포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제1야당 한국당은 “조당적 협력에 나서겠다”면서도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협치의 전제로 내걸고 있다. 친기

업·친시장 모형의 ‘경제정책 대전환’이 한국당 요구사항이다. 황교안 대표의 경우 앞서 12일 여야 5당 대표가 모인 초월회에서 여당을 향해 “정부 대응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 안 되고, 대통령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국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탐탁치 않다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선 박용진 의원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상속·증여세 면제 주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두고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재벌 총수 일가의 온갖 민원을 해결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바른미래와 정의당은 협의체 구성 자체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구성원이 국내 경제·산업 활성에 대해서만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는 외교 전문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에선 심상정 대표가 일본수출규제 대응 관련 5당 대표 공식 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설움 터진 中企·노동계, 거래관행·근로제 등 지적

앞서 5개 경제단체는 협의회 첫 회동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

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다만 중소기업계 일부는 대기업과의 상생형 협업체계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정의당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선 소재·부품·장비 거래 관련 ▲대기업-중소기업 전속거래 관행 폐지 ▲대기업-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정착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정부 출연 연구소 간 3각 클러스터 조성 ▲조세 지원제도 마련 등의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기를 골자로 한 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앞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은 경기 실정 등을 고려해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과 제도 도입 시기를 늦춘다는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정의당과 노동계는 여당 추진안에 대해 “노동 존중을 국정목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직접 퇴행 법안을 만들었다”며 “국가 위기 상황을 기업의 민원 해소 기회로 삼는 악행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日 경제보복 전선서 ‘가짜뉴스’ 경계대상 1호” 文 “日, 잘못된 역사 깊이 성찰하길”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韓, 日보다 신용등급 두단계 높아 정부, 중심잡고 의지 가다듬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는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경계대상 1호로 꼽았다.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나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허위정보·과장된 전망 등은 우리경제를 올바르게 진단하지 못하는 물론, 우리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임을 문 대통령이 부각시킨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파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대외적 도전을 우리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관계부처가 신중을 기울여 함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독립유공자 160명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생존 애국지사·국내외 독립유공자 유족 등 1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최근 구축한 경제보복 전선 관련 ‘잘못된 길’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유족 초청 행사 모두발언 때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의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

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양국이 함께 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를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라고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잘못된 길임을 문 대통령이 규정한 것이다. /우승준 기자

해수부 고창·서천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해양수산부는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후보지로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정부 간 조약으로, 국

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는 보전 가치가 높아 람사르협약의 국제 습지 목록에 등록된 습지를 잘 지키고 현명하

게 이용하는 데 모범적으로 참여한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올해 4월 후보지 신청을 받아 이달 해양보호구역 중앙관리위원회 평가를 거쳐 이들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 도시는 검토 절차를 거쳐 2021년 당시국 총회에서 최종 인증서가 교부된다. /석대성 기자

숙련된 기술자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정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 의결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숙련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합 정보관리체계 대상이 되는 숙련 기술자(2018년 말 기준)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한민국명장(633명), 우수 숙련기술자(384명), 숙련기술전수자(125명), 이달의 기능한국인(142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1687명) 등 총 5047명이다. /손현경 기자 son89@